

# “3차 추경 통과 절실하고 시급”

문 대통령, 국회 압박 나서

“국회 심의 20일째 착수  
조차 못해... 대단히 유감”

민주, 이만주 원구성 매듭  
문 대통령 “민생 직결  
사안, 지체해서는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또다시 압박에 나섰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길어지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구성 협상을 급주 내로 매듭짓고 추경 통과에 속도를 내달라는 최후 압박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21일 이후 이를 만에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추경안의 6월 통과를 강하게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급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기폭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대응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며 추경안의 6월 중 국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국민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 협조만 더해준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던 8일은 물론, 박명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4차 시한(19일)까지도 진척이 없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추경안이 6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야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합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3차 추경 등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주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마쳐줬다

는 계획이다.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원포인트’ 선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대치 정국이 민생에 영향을 주신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 중앙관계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주목’

김이재 의원, 5분 발언서 제안

“골든타임 내 도착 소요시간 줄어들어”

전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선거구) 의원이 제37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앙관계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을 제안, 주목을 받았다.



법에는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되고 결국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 교차로를 지날 때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 김이재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시스템을 도입해 도착 소요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라며 “전북도 역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재제출

사적 이해관계 · 거래 있을시 소속기관장 신고

올 초 20대 국회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등 법률안 37건과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전액 몰수하

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규정은 강화된다.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1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정부안은 폐기됐다. 이후 지난날 ‘즉시 재추진법안’으로 선정, 다시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권익위의 기능을 반부패 · 청렴을 중

심으로 재편하는 2개의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익위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익위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이 심의·의결됐다. /뉴시스

민주, 국회 비상대기령

“이만주 내 원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만주 내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만주 목요일, 금요일은 원구성을 마무리할테니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 시간(거리) 내에 대기해 달라고 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만주 중으로 국회에 복귀하면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합당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할 경우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갖는 방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등의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연관산업 유치 지원책 추진

김성주 의원,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을 갖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 · 조성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연관산업 기업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들의 혁신도시 진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에 대해 이전공공기관의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연건

김 의원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을 집중해 혁신도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기동민, 송기현, 송재호, 신정훈, 위성곤, 윤준병, 임호선, 정필모, 진선미, 한병도,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유호상 기자

#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전

2020년 6월 27일(토) 오후 7시  
전주 흥남문 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 진흥원  
주 관 | (사)전북문화 진흥원  
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3-9700